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헝가리

Republic of Hungary

2022년 10월 28일 | 선임조사역(G2) 황수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93천 km ² 	인구 965만 명 (2021)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대외정책 실리위주 외교정책 
GDP 1,818억 달러 (2021) 	1인당GDP 18,830달러 (2021) 	통화단위 Forint(Ft) 	환율(U\$기준) 303.10 (2021) 

- 헝가리는 중부 유럽의 내륙국으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여 동-서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2022년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우파 피데스당(FIDESZ, 청년민주동맹)이 135석을 차지(득표율 53.29%)하여 56석에 그친 야권연합을 누르고 승리하는 등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장기 집권 중임.
-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며 중부유럽 지역협의체(비셰그라드) 구성원으로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등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오르반 행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인권 침해, 언론탄압 등의 문제로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2. 1 (북한과는 1948. 11. 11)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0), 사증면제협정('9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5), 경제협력협정('05), 사회보장협정('07),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3),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14), 운전면허증상호인정협정('15), 항공업무협정('15), 군사비밀정보교환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2,477,567	2,926,395	4,051,512	전자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수 입	496,286	678,045	749,544	축산물, 전자제품, 수송기계

해외직접투자현황(2021.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658건, 3,479,795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제성장률	5.4	4.6	-4.5	7.1	5.7
소비자물가상승률	2.8	3.4	3.3	5.1	13.9
재정수지/GDP	-2.1	-2.1	-7.8	-6.8	-4.9

자료: IMF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2020년 -4.5%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 7.1%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금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5.7%로 낮아질 전망

- 헝가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 구조,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접근, 유럽 중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한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2017년 이후 3년 간 연평균 4.7%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4.5%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7.1%의 성장을 회복하였음. 다만, 2022년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인해 5%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IMF).
 - 최대 교역 파트너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 침체 및 경제성장률 저하 전망(2022년과 2023년 각각 2.2%, 1.6% 예상)에 따라 헝가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 최근 헝가리의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됨: 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EU와 러시아 간의 긴장 고조로 러시아의 대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시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②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핵심 부품의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③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률(4~5%) 회복은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EIU와 IHS Markit는 헝가리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및 2.4%로 제시하고 있음¹⁾ 금년 1분기 헝가리 경제는 기저효과, 4월 총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의 성장을 보였으나, 2분기 이후 경기가 위축되는 양상임.
 - 기업인 설문조사를 통한 경기전망지수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1년 12월 역대 최고치(66.01)를 기록한 이후 금년 8월 57.8로 전월(58.0)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1995~2022년 장기 평균선인 52.3을 상회함. 금년 1~8월 제조업 PMI 평균은 55.8로, 제조업 경기 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 PMI가 5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을, 50에 미달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
-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으나, 최근의 포린트화 환율 급등과 현저히 큰 공공채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 운신의 폭은 제한적임.

1) EIU Country Report(2022.8월), IHS Markit Country Report(2022.7월).

국내경제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현상(flight to safety)으로 포린트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2020년 79.6%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GDP 대비 공공부채(%) : 72.2('17) → 69.2('18) → 65.6('19) → 79.6('20) → 77.0('21) → 75.5('22)

* 포린트화 환율(US\$ 대비) : 294.74('19) → 297.36('20) → 323.80('21) → 364.18('22.5월) → 428.40('22.9월)

2021년에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및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5.1%에 달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14%에 육박할 전망

- 포린트화의 미 달러화 대비 연평균 환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결과 2021년에 헝가리 공산 정권 붕괴 이후 최고치인 323.80을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수입물가 상승 및 그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출국의 생산 차질 및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것이 소비자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아울러 금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에너지 국제가격이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어, 금년도 헝가리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5.1%) 대비 2배 이상 급등하며 1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헝가리 중앙은행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코자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의 회수를 위해 2021년 중반부터 긴축 통화정책으로 선회하였음. 최근의 가파른 소비자물가상승률(금년 8월 15.6%) 등을 고려할 때, 헝가리의 통화정책은 2023년 상반기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EIU).
- 2022년 헝가리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관별 전망치는 IMF 13.9%, EIU 10.9%, IHS Markit 11.3% 등임

코로나19 팬데믹, 금년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 급증

- 헝가리의 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GDP 대비 -2.0%대 초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경기침체를 촉발하면서 세수가 위축되어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등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0년 -7.8%로 급등하였으며 2021년에도 -6.8%를 기록하였음. 아울러 GDP 대비 공공채무 비중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79.6% 및 77.0%를 기록함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최근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음.
- 헝가리의 202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에 대한 기관별 전망치는 IMF -4.9%, EIU -6.0%, IHS Markit -6.5% 등으로, 헝가리 정부의 재정수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전의 -2.0%대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 상 수 지	415	-1,087	-1,563	-5,191	-7,461
경상수지/GDP	0.3	-0.7	-1.0	-2.9	-4.1
상 품 수 지	-2,629	-4,099	-1,320	-4,399	-7,486
상 품 수 출	104,603	103,618	101,485	122,136	141,023
상 품 수 입	107,232	107,717	102,805	126,535	148,509
외 환 보 유 액	29,649	29,873	38,999	34,927	29,785
총 외 채	155,056	158,686	252,430	262,576	252,485
총외채잔액/GDP	96.6	97.1	161.1	144.1	136.7
D.S.R.	48.2	48.0	53.6	78.3	70.1

자료: IMF, EIU

2019년 시작된 경상수지 적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국제 공급망 교란 및 관광 부문 타격 등으로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GDP 대비 -4% 수준의 적자 예상

- 헝가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분야 수출에 기반한 상품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해 왔으나, 핵심 수출시장인 EU의 경기침체로 2018년 상품수지가 적자 전환한 뒤 2019년에는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도 GDP의 -0.7%에 해당하는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국제 공급망 교란 및 관광 부문의 타격 등으로 상품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경상수지도 GDP 대비 각각 -1.0% 및 -2.9%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정세로 상품수출과 상품수입 모두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상품수출 증가폭(20.3%)을 상품수입 증가폭(23.1%)이 앞질러 상품수지 적자폭이 전년대비 2.3배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2023년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EIU).
- 헝가리 GDP의 약 7%를 점유하는 관광 부문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헝가리 정부 및 각국의 국경 봉쇄, 여행 제한 조치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서비스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여 2021년 58.8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고 금년에도 48.5억 달러 규모의 흑자가 예상됨.
- 한편, 헝가리의 2022년 경상수지에 대해 IMF는 EU의 경기침체,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GDP 대비 -4.1%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EIU와 IHS Markit도 배당금 지급에 따른 소득수지 악화, 수입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각각 GDP 대비 -6.0% 및 -5.5% 수준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외채상환능력

단기외채상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외채상환 위기 발생 시 EU 차원의 금융지원 가능

-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2016년 말 114.3% → 2018년 말 96.6%),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가 역성장한 결과 동년 말 161.1%로 급등하였음. 2021년에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며 동 비율이 144.1%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16~19년 기간 중 연말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달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상품수입 감소에 따라 3.3개월분으로 일시 반등하였으나 2021년에 경기 회복으로 상품수입이 다시 증가하면서 2.5개월분으로 하락하였음. 같은 기간 D.S.R.도 40% 이상을 기록하였고, 작년에는 78.3%로 급등하는 등 단기외채상환위험이 높은 편임.
- 다만,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외채상환 위기 발생 시 EU 차원의 금융지원을 통한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외국인투자자에 주로 기반한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경제-산업구조

- 헝가리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형성함. 이는 유럽 내 다국적기업들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수준을 견비한 헝가리를 조립 및 생산의 거점으로 삼고 헝가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역내 분업 생산구조에 기인한 것임.
- 헝가리의 주요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이며, 헝가리 내수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 운영을 위해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음.
- 헝가리의 산업구조는 HS Code 분류상의 제84류(보일러·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TV·VTR) 및 제87류(승용차, 화물차 등 일반차량)의 3대 품목이 최근 3년 간 전체 상품수출의 55.5%를 점유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표 1] 최근 3년 간 헝가리 상품수출에서 HS Code(2-digit)별 상위 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HS Code	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84	보일러·기계류	16.54%	15.80%	14.45%
85	전기기기·TV·VTR	22.81%	24.52%	24.68%
87	일반차량(승용차, 화물차 등)	17.80%	16.39%	15.48%
3대 품목의 비중 합계		55.26%	56.71%	54.61%

자료: UN Comtrade

수출 및 EU 역내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충격에 취약

- 헝가리 경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이 GDP의 16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 변동이나 교역상대국의 경기침체 등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음.
- 2021년 기준 세계 196개국 중 헝가리의 1인당 GDP는 54위이며, GDP 규모는 59위로 싱가포르(39위), 홍콩(42위) 등 동아시아의 도시국가들보다도 작은 수준임.
- 대부분의 EU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헝가리 역시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입 원천이 EU 역내에 치중되어 경제성장, 경상수지, 외국인투자 유입, 외환보유고 등이 EU 및 유로존의 경기동향에 크게 좌우됨.
- UNCTADstat에 따르면, 헝가리의 2020년 상품무역에서 유럽 지역은 상품수출액의 86.3% 및 상품수입액의 80.2%를 점유하고 있음.

[표 2] 2014~21년 헝가리, EU,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헝가리	4.2	3.8	2.3	4.3	5.4	4.6	-4.5	7.1
EU 전체	1.7	2.5	2.1	3.0	2.2	2.0	-5.6	5.4
유로존 전체	1.4	2.0	1.9	2.6	1.8	1.6	-6.1	5.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2)

구조적취약성

내륙국(landlocked)이라는 지리적 입지는 국제무역 외연 확장에 지장 초래

- 헝가리는 바다에 접하지 않은 내륙국으로서 해운을 통한 상품무역을 주변 국가들의 항만에 의존하고 있음. 이는 미주, 아시아 등지로의 수출시장 개척에 장애요인이 되는 동시에 EU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에 더욱 치중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국제무역의 외연 확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및 고속련 저임금 인적자원 보유

- 헝가리는 구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에 따른 체제 전환 이후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양질의 인프라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의 상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지리적으로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모두 접근성이 뛰어난 중-동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내 중요한 생산 및 물류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헝가리의 고속련 저임금 노동력에 주목한 다국적기업들이 유럽 지역을 관할하는 서비스공유센터(SSC) 또는 R&D 센터를 헝가리에 설립, 운영하고 있음.
-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헝가리의 1인당 평균임금(26,268달러)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2위이자 유럽 지역 25개 OECD 회원국들 중 24위 수준임. 인접국이자 역시 체제 전환국가인 슬로베니아(43,892달러), 폴란드(33,566달러), 체코(31,711달러) 등은 1인당 평균임금이 헝가리보다 높음.
-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P, IBM, Vodafone 등 다국적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공유센터를 헝가리로 이전하였고, Bosch GE 등도 R&D 센터를 헝가리에 설치하였음.

외국으로의 두뇌 유출(brain drain)과 고령화, 출산율 하락 등에 따른 인구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에 위협요인

- 냉전 종식과 체제 전환 이후 지속된 서유럽으로의 인력 유출은 2004년 헝가리의 EU 가입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2008~18년 중 100만 명 이상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외국(주로 EU 회원국)으로 이민한 것으로 집계됨. 65세 인구비중도 2022년에 22%에서 2050년 28%로 높아질 전망이다(EIU).
- 아울러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6~19년 기간중 1.49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0년에 1.52로 상승하였으나, 인접국들인 체코(1.71)나 슬로베니아(1.60)보다 낮은 수준임. 헝가리 정부는 자국 내 부부 중 20% 이상이 불임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 감소(2022년 960만 명 → 2050년 850만 명)로 노동가능인구 비중도 금년 64.6%에서 2050년 58.0%로 감소할 전망이어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제조업 경쟁력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헝가리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전액 지원 중임.

정책성과

EU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중장기 경제성장계획 “Szenchenyi 2020”의 결과 2014~19년 유럽 신흥국보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 유지

- 헝가리 정부는 고용, 혁신, 교육, 사회통합, 기후-에너지의 5개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EU의 성장전략인 ‘Europe 2020’에 대응하여 중장기 성장전략인 ‘Szenchenyi 2020’을 수립, 2014~20년 기간 중 배정 받은 EU 기금²⁾(219억 유로) 포함 총 257억 유로의 예산을 경제개발(35.1%), 도시개발(15.5%), 교통개발(15.2%), 환경에너지(14.7%) 등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4~19년의 6년 간 연평균 4.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유럽 신흥국 대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2021년에도 7.1%의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였음.

[표 3] 2014~21년 헝가리 및 유럽 신흥국 평균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헝가리	4.2	3.8	2.3	4.3	5.4	4.6	-4.5	7.1
유럽 신흥국 평균	1.8	1.0	1.9	4.1	3.4	2.5	-1.7	6.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2)

외국인투자예 개방적인 정책 기조로 핵심 산업 부문에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 헝가리는 외국인투자(특히 제조업 부문)에 개방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법인세율은 2020년 말 기준 몬테네그로와 더불어 유럽 내 최저 수준인 9%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전자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2021년 중 5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꾸준한 유입을 보이고 있음(2018년 64.6억 달러 → 2019년 43.3억 달러 → 2020년 68.0억 달러 → 2021년 54.6억 달러).
- 2020년 말 기준 유럽 국가들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몰타(35%)이고 프랑스(32.02%)와 포르투갈(31.5%)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헝가리 주변국들의 경우 오스트리아(25%), 슬로바키아(21%),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각각 19%), 크로아티아(18%) 등으로 헝가리보다 높은 수준임(Tax Foundation).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경영환경 조사에서는 전보다 부진한 순위를 기록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서 헝가리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52위를 기록, 과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통관 행정(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29위) 및 자금 조달(Getting credit, 37위) 부문에서도 29위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반면, 건축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08위) 및 전력 공급(Getting electricity, 125위) 부문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에 그쳤음.

2)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ESIFs) :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역내 균형발전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 회원국들에 주로 지원됨.

정책성과

EU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성과는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

- 헝가리 정부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 중이며 이를 통해 EU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
- 2021년 헝가리 상품무역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유럽 지역이 상품수출액의 83.9% 및 상품수입액의 79.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상품수출액의 8.6% 및 상품수입액의 16.3%에 불과함(UNCTAD).
- 아울러 유럽-아시아 외의 지역(미주, 대양주, 아프리카)의 비중은 상품수출액의 5.8% 및 상품수입액의 3.1%로 더욱 미미한 수준임.
- 유럽 중에서도 EU 28개 회원국의 비중은 상품수출액의 77.5% 및 상품수입액의 72.9%이며, 28개 회원국 중에서는 독일이 상품수출액의 26.3% 및 상품수입액의 23.8%로 각각 최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표 4] 2016~20년 헝가리 상품수출액의 지역별 비중

수출상대국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럽	83.2%	83.9%	84.9%	85.5%	84.9%	84.0%
> (EU)	(73.4%)	(73.9%)	(75.0%)	(75.4%)	(74.9%)	(74.1%)
>> (독일)	(27.4%)	(27.1%)	(27.2%)	(27.3%)	(27.5%)	(26.3%)
아시아	9.0%	8.8%	8.2%	7.5%	8.3%	8.6%
> (중국)	(2.8%)	(3.0%)	(2.8%)	(2.2%)	(2.7%)	(2.9%)
그 외 지역	7.8%	7.3%	7.0%	7.1%	6.8%	7.4%

자료: UNCTADstat

[표 5] 2016~20년 헝가리 상품수입액의 지역별 비중

수입상대국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럽	84.2%	84.1%	83.1%	81.2%	78.0%	79.7%
> (EU)	(76.1%)	(74.8%)	(73.7%)	(72.2%)	(70.7%)	(71.7%)
>> (독일)	(27.0%)	(26.5%)	(25.9%)	(25.3%)	(24.6%)	(23.8%)
아시아	12.9%	13.0%	14.3%	15.9%	19.2%	17.3%
> (중국)	(5.3%)	(5.1%)	(5.4%)	(6.1%)	(7.9%)	(7.1%)
그 외 지역	2.9%	3.0%	2.6%	2.9%	2.8%	2.9%

자료: UNCTADstat

정치동향

2022년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 피데스(FIDESZ)의 승리로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 유지

-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피데스(FIDESZ)가 54%를 득표하여 135석을 차지하고, 야권연합이 34%를 득표하여 57석을 차지하였음. 나머지 7석은 6%를 득표한 극우정당(Our Homeland)에 돌아감으로써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유지하였음.
- 야권의 패배는 내부의 당파 간 분열과 여당에 편파적인 언론 보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2024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이후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으며, 3권 분립의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핵심 권력은 오르반 총리와 그의 측근들에게 집중되어 있음.

오르반 총리의 극우 민족주의 성향과 독재 추구로 EU와 갈등이 고조

- 집권 여당은 2018년 총선 승리 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개헌을 단행하여 정부가 헌법재판소, 중앙은행,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EU 회원국 간 난민 수용 할당을 거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EU의 이념과 역행하는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EU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2022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의 공공조달 관련 부패, 이해충돌 방지 관련 문제, 반부패기구 관련 이슈 등을 포함한 법치주의 위반을 이유로 75억 유로 규모의 EU 기금 지원 중단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헝가리 정부는 부패방지기구 설치 등 개혁안을 EU와 협의하기로 하였음.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취임 이후 3권분립 훼손, 언론 탄압 등으로 독재권력 강화

- 1998년 7월~2002년 5월 총리직을 역임한 뒤 2010년 5월 총선 승리로 다시 총리직에 취임한 오르반 총리는 2014년, 2018년 및 2022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여 장기 집권하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제도 개혁을 장기에 걸쳐 추진하고 있음.
-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총리직 취임 후 검찰총장 임기를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검찰총장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하였으며, 2011년에는 개헌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8년 4월 총선 승리로 의회를 장악한 이후에는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행정법원을 설립하여 선거법 관련 사건, 부정부패, 집회-시위 등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법원에서 처리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내외 반발을 초래하였고, EU의 강한 압박으로 결국 행정법원 설립을 포기하였음.
- 아울러 2020년 3월 코로나19 방지법을 통해 총리에게 특별권한(근거 법률 없이 행정명령으로 통치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국가비상사태 연장 가능 등)을 부여하고 정부의 언론통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방역을 빙자한 총리의 권한 강화라는 대내외적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의회는 동년 6월 동법의 폐지를 의결하였음.

사회동향

극우 민족주의 득세로 난민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및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 증가

- 헝가리는 게르만 민족 또는 슬라브 민족으로 이루어진 주변국들과 달리 마자르 민족이 주축을 이루는 나라로 과거 오스트리아 제국 치하에서 민족주의 의식이 대단히 강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한 이후 민족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져 현재 EU 회원국 중에서도 외국인과 '집시'라 불리는 로마족(Romani) 등 소수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음.
- 이러한 민족주의 성향은 오르반 총리 집권 이후 극우 민족주의가 득세하며 더욱 뚜렷해졌으며, 시리아 내전 결과 유럽으로 유입된 중동 난민에 대한 사회 전반의 혐오감과 적대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EU의 난민 분산수용 정책을 거부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등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시민사회의 취약성과 정부 여당의 탄압으로 비정부기구(NGO) 들의 활동 미약

- 헝가리의 시민사회는 서유럽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으로, 사회단체들은 자금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현재 헝가리 납세자들은 개인 소득의 1% 정도를 사회단체나 자선조직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보건, 문화, 지역사회 자선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 사회 관련 분야는 소외됨.
- 헝가리 정부는 2010년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 이래 정부 방침에 동조하지 않는 NGO들에 대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외국의 이익을 위해 매국적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온갖 탄압을 가하여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음.
- 특히 정부 투명성 제고, 성소수자 및 여성 권리 옹호, 환경보호 등을 주장하며 헝가리 정부의 극우 보수주의 정책과 충돌하는 NGO들이 탄압의 주요 대상임.

오르반 총리 재집권(2010년) 이후 언론 자유도가 매년 하락 추세

- 오르반 총리의 언론 탄압으로 헝가리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22년 5월 3일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59.80점(0에 가까울수록 언론자유도가 낮음)으로 85위를 기록, 전년보다 7계단 상승하였으나 EU 회원국 중 최하위인 불가리아(91위)보다 바로 위의 순위임. 이는 아이티(70), 말라위(80위), 코모로(83위), 기니(84위) 등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빈국들보다 낮은 수준임.
- 오르반 총리 재집권 이후 동 지수에서 헝가리의 순위는 2013년 56위를 기록한 것이 최고이며 이후 하락을 거듭하여 2018년 73위, 2019년 87위, 2020년 89위, 2021년 92위로 하락하였음.

국제관계

오르반 총리의 우파 민족주의적 정책에 따른 시민의 권리 침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 난민 수용 거부 등으로 EU와 잦은 마찰 발생

- 헝가리는 2004년 EU에 가입하였고,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여 이들 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주변국들과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 이후 시리아 난민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와 EU의 회원국별 난민 할당 수용에 대한 반대 입장, 성소수자 및 집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박해 등 극우 민족주의 성향 정책으로 EU와 갈등이 심화되었음.
- 최근(2022년 9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의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75억 유로에 달하는 EU 기금 지원 보류 방침을 밝히는 등 헝가리 정부에 법치주의와 민주적 가치 회복을 촉구하는 상황임.

주변국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민족 문제 등으로 갈등 잠복

- 인접국들 중 루마니아와는 트란실바니아 지방에 거주하는 약 120만 명의 헝가리계 주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와는 과거의 영토 할양과 현재까지 슬로바키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헝가리계 주민 문제 등으로 뿌리깊은 불화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트리아농 조약에 따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해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던 보헤미아, 모라비아와 헝가리의 일부였던 슬로바키아가 통합하여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하면서 헝가리 영토의 일부와 동 지역에 거주하던 헝가리계 주민들이 현재의 슬로바키아로 귀속된 것이 현재 양국 간에 지속되고 있는 양금과 갈등의 원인임.
- 다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모두 폴란드, 체코와 함께 1991년 지역 협의체인 비셰그라드(Visegrad) 그룹을 결성하여 역내 협력을 추진하면서 관계가 호전되었으나, 오르반 총리의 극우 민족주의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외교관계 경색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EU 및 NATO 회원국임에도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 헝가리는 EU 및 NATO 회원국이면서도 EU, NATO와 적대 관계인 러시아 및 중국과 정치적 및 경제적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EU 등 서방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오르반 총리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으로 촉발된 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해제를 주장하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에도 러시아의 편을 드는 등 서방의 반감을 샀음. 이러한 행보는 에너지 안보 외에도 오르반 총리의 극우 민족주의 성향과 푸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서로 닮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중국과는 2015년 '신(新)실크로드 협정'을 체결하고 발칸 반도를 관통하는 총연장 350km의 고속철 사업(재원은 18.5억 달러 중국차관, 20년 만기 연이율 2.5%)을 진행 중이며, 이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첫 번째 EU 내 프로젝트임. 이외에도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헝가리 내 생산, 중국 푸단대학교의 부다페스트 분교 설치 등 친중국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2013년 IMF 대기성 차관을 조기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 헝가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 악화로 외채상환 부담이 커지자 IMF와 2년 간 157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협정을 체결하였음. 2011년 말 IMF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재정상태 개선 등으로 추가 지원을 받지 않고 외채상환 문제를 해소하였음.
- 2013년 8월에는 IMF 대기성차관 잔액 28.5억 달러를 전액 조기 상환하였고, 현재까지 이자 연체 등이 발생하고 않고 있어 외채관리능력 및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미평가 (2016.06)	4등급(2016.01)
Moody's	Baa2 (2021.09)	Baa3 (2020.09)
Fitch	BBB (2019.02)	BBB- (2017.11)

국제신용평가3사는 헝가리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 부여

- S&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3사는 헝가리에 대해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투자적격 등급 범위 내에서는 최하위 수준임.
- 한편, OECD는 헝가리에 대해 2016년 1월 4등급을 부여한 이후 OECD 회원국(1996년 가입)이자 유로존 고소득국임을 이유로 국별신용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 EU 역내의 상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시장 확보,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형성하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가 -4.9% 역성장하였으나, 2021년에는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7.1%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 2022년 4월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FIDESZ가 54%의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유지하였으나, 포퓰리즘과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오르반 총리가 독재 권력을 강화하며 사법부 독립성 훼손, 언론 탄압 등을 지속하여 대내외적인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 EU 및 NATO 회원국으로 서방과 협력 관계이나, 오르반 총리의 배타적인 극우 민족주의 정책, 최근의 친러시아 및 친중국 기조 등으로 EU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음.
- EU 회원국으로 재정위기 발생 시 EU 차원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최근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달하고 2021년 말 D.S.R.도 78.3%로 단기외채상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